

“가족과 함께 조용한 이별”...‘무빈소 장례’ 확산

가족장 문의·이용 급증...상조업계 변화 대응 분주 비용 10% 수준으로 저렴...음식·접객 부담도 줄어

최근 부친상을 치른 광주 시민 김모 씨(54)는 빈소를 차리지 않는 이른바 ‘무빈소 장례’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친척과 지인들에게는 부고를 최소한으로 알리고 가족들만 입관과 발인, 화장을 함께했다. 김씨는 “예전 같으면 체면 때문이라도 빈소를 마련했겠지만 조문객을 맞느라 정작 가족들이 추모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다”며 “장례는 보여주기보다 가족의 마지막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도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가족만 고인을 배웅하는 ‘무빈소 장례’가 새로운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무연고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주

로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현실적인 이유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조문 문화, 고인의 뜻을 존중하려는 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반 가정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 장례업계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무빈소 장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와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 장례식장들은 이러한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금호장례식장은 최근 두 달 사이 무빈소 장례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 월 3~5건 수준이던 무빈소 장례가 최근에는 월 10

건 안팎으로 증가했고, 관련 문의도 수십건에 이른다.

금호장례식장 관계자는 “예전에는 비용 때문에 조심스럽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가족끼리만 조용히 치르고 싶다’며 먼저 무빈소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녀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가족 규모가 작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빈장례식장도 한 달 평균 4~5건의 무빈소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이 있는 고령층까지 선택층이 넓어지는 분위기다.

국빈장례식장 관계자는 “9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생전에 ‘조문객은 받지 말고 가족끼리만 보내달라’는 뜻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빈소는 운영하지 않지만 가족들이 충분히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별도의 이별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장례식장과 베스트장례식장 역시

최근 1~2년 사이 무빈소 장례와 관련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이 적거나 조문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형제와 직계가족만 참여하는 소규모 가족장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빈소 장례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이다. 광주지역 일반 장례는 조문객 규모에 따라 평균 500만~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무빈소 장례는 150만~300만원 수준이면 가능하다. 일반 장례의 경우 음식과 접객 비용이 전체 장례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무빈소 장례는 이러한 비용이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다.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예전에는 조문객이 50명 정도만 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음식은 60인분 이상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최근에는 부의금을 제화이체로 보내고 직접 조문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음식 비용 부담을 줄이려

는 가족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장례식장들도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가족 중심의 장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장례식장은 소규모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가족장을 위한 상품을 운영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가족화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장례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조문객을 맞이하는 의례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제는 고인의 뜻과 가족의 추모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체면 때문에 빈소를 차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고인의 뜻과 가족의 의사를 우선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며 “광주도 앞으로 10년 안에는 가족장과 무빈소 장례가 일반적인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5:43	🌙 맑음	21:54
☀️ 맑음	19:34	🌙 맑음	10:00



광주	☀️	26~38
목포	☀️	26~35
여수	☀️	26~38
순천	☀️	25~37
구례	☀️	24~37
광주	☀️	26~37
임도	☀️	26~37
흑산도	☀️	26~34
진남	☀️	26~37
진도	☀️	24~35

목포	☀️	05:05 / 17:22
여수	☀️	10:16 / 22:27
여수	☀️	11:52 / --:--
여수	☀️	05:39 / 17:43

장윤기 보완수사 놓고 검·경 책임공방 ‘격화’

경찰직협 “성범죄 가능성 염두...추가수사 필요성 기재” 검찰 “요청 없어”...전 광산서 형사과장 두 번째 영장 기각

장윤기 사건의 보완수사를 둘러싸고 검·경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면서 수사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측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 필요성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정책연구소(전정연)는 지난달 3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명분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검찰은 살인·의견조사 수사보고서, 보완수사 착수 경위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정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가 있었다면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아직 사실관계와 형사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수사팀과 일선 경찰관을 범죄 은폐 세력으로 단정하고 이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정연은 “경찰은 살인·의견조사 성범죄 목적과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기재했지만, 검찰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만약 경찰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적시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지휘부는 하위직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을 이유로 추진되는 전국 단위 강제 순환보직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강제 순환인사 추진에 반대하는 릴레이 사발 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 측은 경찰 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지난 5월14일 송치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A4 두 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해 달라거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보고서의 핵심 취지는 강간 등 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므로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내용”이라며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하지 못했거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 역시 담겨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측이 초동수사 성과로 제시한 케이블타이 관련 내용 역시 송치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약 15분간 뒤쫓은 점과 과거 성범죄 범행 방식, 미리 구입한 케이블타이, 차량 포렌식 결과,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분석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범행을 입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를 받고 있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책과 함께 떠나는 피서 여행’ 새마을문고광주시동구지부(회장 신동서)는 지난 1일 김대영 동구새마을회장과 문고회원 1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금남로 차에서 여름휴가 및 주말 가족들이 시민들과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도서를 대여하는 피서지문고 부스를 운영했다. 피서지 무료도서 대여는 책을 읽는 습관을 생활화로 인문도시 활성화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소득기준 없애니 ‘천원택시’ 신청 5배 급증

광주특별시 남구 주민들, 이동권 보장 ‘만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건강·교통 이동 약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천원택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용 대상 기준을 완화한 이후 서비스 신청자가 5배 이상 늘면서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천원택시는 올해 1월부터 건강·교통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신규 교통복지 서비스다.

사업 초기에는 장기요양 1~4등급이면 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용 수요가 늘자 지난 3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 기준 완화는 신청자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올해 1~2월 두 달간 천원택시 신청자는 151명에 그쳤지만, 기준이 완화된 이후인 3~7월에는 803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월별로는 3월 304명, 4월 219명이 신청했으며, 5월부터 7월 30일까지도 280여명이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천원택시가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월산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남구청 홈페이지에 “병원을 오갈 때 교통이 불편했는데 좋은 제도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들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원택시 이용 현황과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yd0316@

전남광주 마약사범 급증...전국 평균 증가율 6배

지난해 1134명...신종 마약 유통·양귀비 불법 재배 정부, 휴가철·추석·할러윈 등 10월까지 특별단속

전남광주 지역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으로 전년(2만3022명)보다 1.7% 증가했다.

2022년 1만8395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급증한 이후 3년 연속 2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마약 범죄가 일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광주지검 관할 마약사범은 지난해 1134명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1.7%)의 6배를 웃

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저연령화다. 지난해 전국 마약사범 가운데 20~30대가 약 60%를 차지했고, 30대는 처음으로 20대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지역별 특성을 띤 마약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케타민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 유통이, 전남에서는 양귀비 불법 재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할러윈 시즌 등 마약류 범죄 취약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의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러킹·유흥주점 등 취약지역 집중 단속 △스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관세청과 검찰, 경찰, 해양경찰, 국가정보원은 공항과 항만, 해상에서 합동 검색을 강화하고, 범죄정보를 공유해 해외 밀반입 조직을 집중 차단한다. 아시

아·태평양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할러윈 기간에는 클럽과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마약류와 주사기, 바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속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유통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케타민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과 SNS를 통한 판매 행위를 집중 추적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자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물

수·추진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감시체계를 활용해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내역을 상시 분석하고, 명의도용이나 셀프 처방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점검과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해외 반입부터 국내 유통,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까지 전 과정을 집중 단속하겠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마약 범죄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